

투데이 칼럼

포용과 배려의 문화,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출발점

“출산휴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글쎄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보통은 그냥 퇴사했죠.”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tvN 드라마 ‘서초동’의 한 장면이다. 임신 사실을 어렵게 깨낸 여성 변호사와 이를 무심하게 받아치는 로펌 대표의 대화를 보며 많은 시청자가 묘한 기시감과 불편함을 느꼈을지 모르겠다. ‘맞아, 우리 회사도 그랬지’, ‘나도 나중에 저러면 어쩌지 하면서 말이다.’

엄연히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출산·육아 제도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일터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암묵적인 장벽 앞에서 많은 엄마, 아빠들이 상사에게, 때로는 동료들에게 눈치와 부담을 느낀다. 드라마보다 더한 대화가 현실에서 오고 간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귀농·귀촌 지원부터 출산장려금, 결혼축하금까지 각종 인구정책을 시행하며 독려에 나서는 공공부문조차도 예외는 아니다. ‘당장 일이 많으니까’, ‘대신 할 사람이 없는데’라는 이유로, 관련 지원책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인식은 희석되곤 한다. 이런 조직문화 속에서 육아휴직은 물론,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쓰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유 경 자
장수군의회 부의장

에도 꽤 깊은 고민 속에서 용기를 쥐어짜고 있을 누군가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가리키는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가 출산을 하라 원인의 40% 가량을 차지한다. (KDI포커스: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을 감소 2024.4.) 경력단절이나 소득 감소, 승진 기회 상실 등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결정적 장애물이라는 분석이다.

필자는 최근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 배려 방안’을 제안했다. 출산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자는 큰 틀에서,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근무평정 가점 확대. 현재는 셋째 자녀부터 가점을 부여하지만, 최근

다자녀 기준이 2명 이상으로 바뀐 흐름에 맞춰 둘째부터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근무환경의 유연성 확대다. 인사부서 내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육아기 공무원의 고충을 듣고, 자녀 양육 여건을 고려해 근무시간에 배치하거나, 육아시간과 유연근무제 활용을 장려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상시 인력풀을 구축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다. 물론, 이런 배려가 다른 구성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출산 여부를 기준으로 선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지속가능한 공동

체를 설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장수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사망자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학교 폐교와 읍면 공동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지역소멸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개인에게 맡겨둘 수 없는 공동체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 인구 위기는 어쩌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과 육아를 선택한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주 5일제 근무도 한때는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먼저 변화를 시작했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여 지금은 주 4.5일제까지 추진되고 있다. 교령화·저출산으로 인구소멸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공직사회가 다시 한번 변화를 이끌어준다면 어떨까? 우리 사회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아이 낳은 죄, 아이 키우는 벌’처럼 간주하던 시대를 건너왔다. 예전에는 말도 꺼내기 어려웠던 것들이 제도화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화고는 있지만, 제도와 문화 사이의 간극이 아직 존재한다.

출산을 격장하는 정책이 없어도 출산이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기 위해 이제 여기서 함께, 한 발짝 더 나아가자.

독자제언

끝까지 지켜야 할 동행, 치매노인 실종의 현장에서...

며칠 전, 평온하던 파출소에 긴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치매를 앓는 어르신이가 가족과 함께 여행 중 머물던 펜션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내용이었다. 한낮의 열기가 제 가지지 않은 오후였고, 해가 서서히 지고 있던 시각, 주저할 틈이 없었다. 112상황실도 밝혔다. 곧바로 인근 파출소와 형사, 여청, 사고조사팀, 교통경찰, 소방, 마을주민까지 총동원됐다. 마을의 CCTV를 확인하고 지형과 동선을 분석한 뒤, 수풀과 도로변, 인근 마을까지 2시간에 걸친 수색을 벌였다. 어둠이 내리기 직전, 마침내 펜션에서 상당히 떨어진 산 아래 숙박업소에서 무사히 어르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지 지리에 밝은 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의 발 빠른 대응과 헌신적인 협력이 결정적이었다. 지역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 협력이 치매 노인 실종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다시금 실감한 순간이었다. 당시 가슴에 가장 깊게 남았던 감정은 다름 아닌 “조금만 늦었더라면...” 하는 아찔함이었다. 실종 당시 기온은 섭씨 30도를 넘었고, 주변은 논과 들이 이어진

농촌 지역이었다. 체온 조절이 어려운 고령자에게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경찰청과 국회 최보은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매노인 실종 신고는 연평균 약 1만 3천 건, 이 중 90명 이상이 매년 안타깝게도 사망한 채 발견되고 있다. 2023년 한 해만 해도 실종 신고는 14,677건, 그 중 8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하루 평균 40건으로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치매노인의 실종은 단지 가족의 부주의로 돌릴 수 없는 문제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대비해야 할 공공의 과제다. 특히 외출 시에는 GPS 배회감지기 착용, 인식표 부착, 경찰 지문 등록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경찰은 끝까지 찾는다. 그러나 그 시작은 가족과 이웃의 따뜻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돌봄은 함께 걷는 여정이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엔,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이 있다. 이주연 고창경찰서 해리파출소 수사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군 통수권 이양받는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



카를 나브로츠키 폴란드 신임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폴란드 비르사피 파우슈츠키 광장에 있는 무명용사 묘에서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5년 임기를 시작한다.

사설

이재명 대통령 모교

이재명 대통령의 초등학교 모교는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월곡초 삼계분교장이다. 이 학교가 6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최근 이 학교는 오는 9월 폐교를 앞두고 마지막 수업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교로 알려진 이 학교는 최근 몇 년간 신입생이 전무하여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마지막 남은 학생 김이지 양은 본교인 월곡초등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이지 양은 삼계분교장의 유일한 학생으로, 담임교사 전재준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 수업을 진행했다. 전 교사는 김 양에게 “우리 학교 전교 회장이자, 가장 착하고 똑똑한 학생”이라며 농담 섞인 칭찬을 건넸다.

김 양은 수업 내내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삼계분교장은 1954년 개교 이

후 많은 학생들을 배출했다. 한때는 6학년 학생 수가 70명을 넘기도 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함께 신입생이 줄어들면서 결국 폐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김 양은 “1학년 신입생 때부터 다닌 학교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속상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경북 지역에서는 이번 폐교를 포함해 총 7개의 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닫는다. 교육 당국의 작은 학교 살리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양은 “우리 학교에서 대통령이 나온 게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모교 가운데 초등학교는 월곡초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이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검정고시 출신이라 모교가 없다.

전 대한노인회장 발금형

전 대한노인회 회장이 회장 지위를 이용해 지난 22대 총선에서 노인복지당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노인회 직원과 회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식사와 후원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항소했고, 검사 측도 하루 뒤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인회 회장이었던 지난해 3월 4·10 총선을 앞두고 친동생이 출마한 노인복지당 선거운동에 나섰다.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25일 노인회가 주최한 워크숍에서 노인회 전국 사무처 국장 등 참석 직원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당에서 5명을 임후보 했으니 경로당도 모두 밀어주고 베트남 전우회도 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후 열린 또 다른 세미나에서는 “노인복지당이 당선되면 24시간 365일 노인을 위해

일할 것이니 협조해 달라”고 했다.

노인복지당에는 전 회장의 친동생인 한국응용통계연구원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출마한 상태였다. 선거법은 단체 내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후보 가족이 임원일 경우 단체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노인회 임직원에게 각 지회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

그는 이미 두 차례 같은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노인복지당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5명을 냈지만, 득표율은 0.05%에 그쳤다.

전 회장은 경남 마산 합포구에서 제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16대 총선 때도 같은 지역에서 당선됐지만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